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7.

발 의 자 : 소병훈 · 김승원 · 김정호  
문정복 · 박 정 · 신정훈  
오영환 · 용혜인 · 이학영  
임종성 · 최기상 · 허 영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,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규모, 실제 비용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 ~ ③ (생략)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u>&lt;후단 신설&gt;</u>	- <u>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규모, 실제 비용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</u>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